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7월 31일(수)

「국가 사이버안보 협의회」 출범

- 대통령실, 사이버안보 정책 및 현안 논의를 위한 범국가적 협의회 개최 -
-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이행 위한 후속 기본계획과 100대 실천과제 점검 -
-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사이버공격 등 대비, 정부와 민간 협업 강화 모색 -

대통령실은 오늘(7/31, 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사이버위협 대응 등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 중인 14개 정부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통일부, 대검찰청, 경찰청

왕 차장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최근 오물 풍선 살포 등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가 배후 및 국제해킹조직 등 세계 곳곳의 해킹조직 또한 우리의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정보를 노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Cloud) 등 최신 IT기술을 사이버 공격에 악용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다면서 유관 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범정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기관이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과 현안 사항들을 신속히 공유하고 논의해,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맞서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2월 1일에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과 100대 실천 과제*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점검했습니다.

* (과제) 국가배후 해킹조직 대응활동 강화, 사이버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참여, 클라우드 보안인증(등급제) 운영, 양자컴퓨팅 대응 암호 구축,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

정부는 앞으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과 실천과제의 이행실태 점검 및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의 시행 등 중요 사안에 있어서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할 경우 동 협의회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이버위기관리 주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간사 기관 역할을 하고 사안별로 민간 전문가도 초빙해 의견을 듣는 등 명실상부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협업 및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핵심 기능은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통해 유관부처와 민간 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향후 우방국들과의 합동 대응시스템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